

(특집) 개성공단의 민간 금융 지원 방안

조봉현 /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머리말

지난 10월 북핵 실험 이후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렇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제 사업이자 평화 사업이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주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인 원활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금 부족 현상은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지만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체계가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장의 담보 제공 곤란과 국가 위험도(Country Risk) 등으로 은행으로 부터의 대출이 어려운 것이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본 단지 개발이 완료되어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입주하기 시작하면 자금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협력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자금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1단계 입주 기업(300개)의 자금 수요는 총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남북협력기금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금융수급 불균형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조 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나,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의 개성공단 자금 지원체계로는 개성공단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한계기업 진출 등 정책적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이 작동하여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의욕은 있으므로 적절한 리스크 분산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민간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의향과 금융 수요 예측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의향¹⁾

중소기업의 과반수가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진출을 구

체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한 업체는 56.3%인데 반해 전혀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5.9%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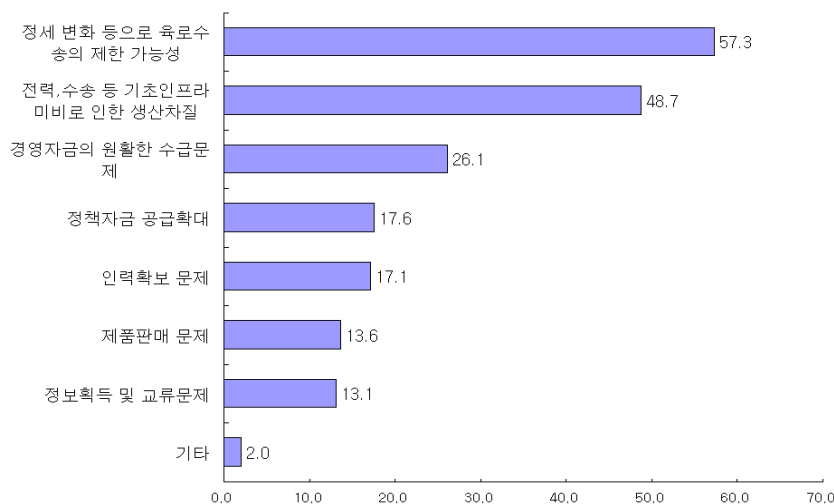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고려	진출의향 있으나 상황에 따라 고려	진출의향 없지만 상황에 따라 고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34.5	21.8	21.4	6.4	15.9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양질의 인력 활용(61.0%)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 생산 여건 열악(48.5%), 해외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지 조건(48.0%), 중국 등 다른 국가 진출비용보다 저렴(4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조기에 진출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진출 시기에 대해서는 2007년 이내가 5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8~2009년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33.0%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7.9%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핵 실험 이후 연기해온 개성공단 본 단지 분양을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진출 이후 업체들이 예상하는 경영상의 주된 애로사항은 정세변화 등으로 육로수송의 제한가능성(5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수송 등 기초 인프라 미비로 인한 생산차질(48.7%), 경영자금의 원활한 수급문제(26.1%), 정책자금 공급확대(17.6%), 인력확보문제(17.1%) 등의 순이다. 개성공단 인프라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자금 문제는 업체가 당장 직면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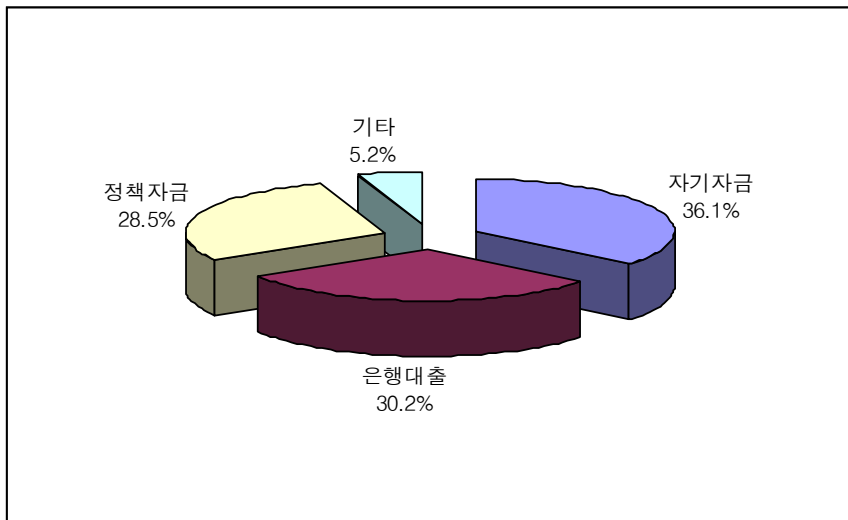
<그림 1> 개성공단 진출 이후 예상되는 경영상 애로사항



1) 기은경제연구소에서 지난 2006. 7~8월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회수업체 250개 업체)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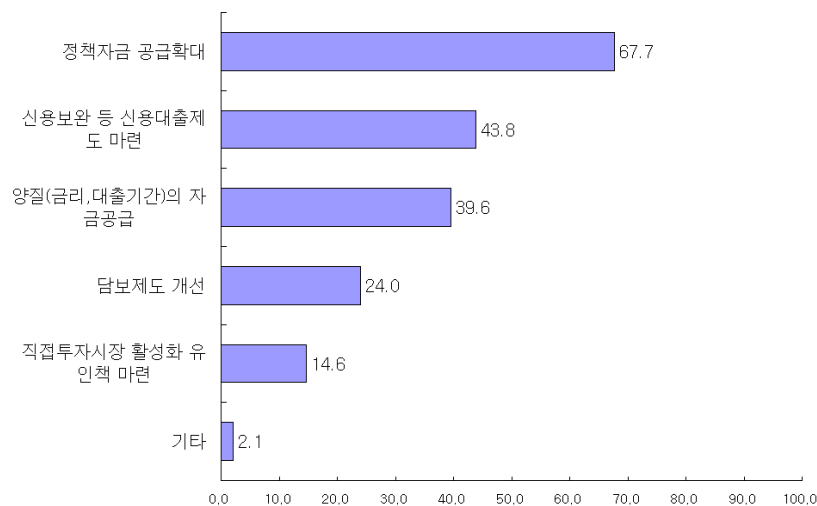
개성공단에 투자할 예상 규모는 업체당 평균 23.7억 원(설비 자금 평균 16.7억 원, 운전자금 평균 7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자기자금 조달(36.1%)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은행 대출(30.2%), 정책 자금(2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입주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개성공단 입주자금 조달 방법



개성공단 입주 자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된 정책 과제로는 정책 자금 공급 확대(67.7%) 및 신용 보완 등 신용대출제도 마련(43.8%) 등을 들고 있다.

<그림 3> 개성공단 입주자금과 관련한 정부의 주된 정책 과제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투자를 위한 은행 대출 확대가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 자금은 지원 규모의 제약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어 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한 정책 자금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자금 수요 예측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자금 수요 예측은 어떤 기준과 가정을 기초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범단지 및 1단계 1차 분양용지 입주 기업의 사례와 자금 수요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개성공단 전체 800만평과 확장 구역까지 포함한 입주 기업의 자금 수요는 약 20조 454억 원이다.

개성공단 개발 단계별로는 1단계 1조 8,704억 원, 2단계 4조 2,840억 원, 3단계 8조 4,950억 원, 확장구역 5조 3,9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용도별로는 공장 건축비가 전체 소요 자금의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자금 수요는 71.7억 원(분양 대금 4억 원, 공장 건축 44억 원, 설비 자금 16.7억 원, 운전자금 7억 원)으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기업 투자 규모(입주업체별로 약 50~100억 원)의 평균 수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표 2> 개성공단 입주 기업 자금 수요

(단위 : 개, 만평, 억 원)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 구역	계
입주예상 기업 수	300	700	1,000	800	2,800
공장 용지 면적	66.3	150	350	200	766.3
토지 분양대금(a)	994.5	2,250	5,250	3,000	11,494.5
공장 건축 면적	53.04	120	280	160	613.04
공장 건축비(b)	10,600	24,000	56,000	32,000	122,600
설비 자금(c)	5,010	11,690	16,700	13,360	46,760
운영 자금(d)	2,100	4,900	7,000	5,600	19,600
계(a+b+c+d))	18,704.5	42,840	84,950	53,960	200,454.5

(추산근거)

- ① 토지 분양 대금 : 공장 용 지면적 766.3만평×평당 분양가 15만원=1조 1,494.5억 원
 - 1단계의 경우 : 공장 용지 면적 66.3만평×평당 분양가 15만원=994.5억 원
 - * 공장용지 면적 : 공단 개발계획상의 기준
- ② 공장 건축비 : 공장 건축 면적 613만평×평당 건축비 200만원=12조 2,600억 원
 - 1단계의 경우 : 공장 건축 면적 53만평×평당 건축비 200만원=1조 600억 원
 - * 공장건축 면적 : 공장 부지 면적의 80% 적용
 - * 평당 건축비 : 시범단지 및 1차 분양 기업 평균 기준 200만원 적용
- ③ 설비 자금 : 입주 예정 업체 수 2,800개×업체당 평균 16.7억 원=4조 6,760억 원
 - 1단계의 경우 : 입주 예정 업체 수 300개×업체당 평균 16.7억 원=5,010억 원
 - * 입주 예정 업체 수 : 공단개발 계획상의 기준
 - * 자금 수요 실태 조사 결과 업체당 평균 설비 자금 수요 : 16.7억 원

④ **운전자금** : 입주 예정 업체 수 2,800개×업체당 평균 7억 원=1조 9,600억 원
 - 1단계의 경우 : 입주 예정 업체 수 300개×업체당 평균 7억 원=2,100억 원
 * 자금수요 실태 조사 결과 업체당 평균 운전자금 수요 : 7억 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민간 금융에서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는 1단계 7,843억 원, 2단계 1조 7,738억 원, 3단계 4조 1,965억 원, 확장 구역 2조 3,772억 원 등 총 9조1,318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 3> 개성공단 입주 기업 민간 금융기관 조달 자금 수요
 (단위 : 억 원, 개)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 구역	총계
총 자금수요(A)	18,704.5	42,840	84,950	53,960	200,454.5
지원 예상업체수	300	700	1,000	800	2,800
남북협력기금지원 예상액(B)	7,500	17,500	25,000	20,000	70,000
부족금액(A - B)	11,204.5	25,340	59,950	33,960	130,454.5
기업 자체 조달	3,361	7,602	17,985	10,188	39,136
민간 금융기관 조달 자금 수요	7,843	17,738	41,965	23,772	91,318

주 : 1) 남북협력기금지원 예상액은 시범단지 입주 기업 업체당 평균 대출 규모 25억 원 기준으로 산정(1단계의 경우 입주 예정 기업 300개×25억 원 = 7,500억 원)
 2) 민간 금융 지원 수요는 입주 기업의 경우 소요 자금의 30%는 자체 자금으로, 나머지 70%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가정

금융기관의 개성공단 지원 현황 및 저해 요인

금융 지원 현황

현재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략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직접 대출, 민간 금융기관과 남북협력기금의 협조 대출,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이다. 지원 실적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외에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표 4> 개성공단 입주 기업 금융 지원 실적

지 원 방 식	업체수(개)	지원내역(억 원)	비 고
- 남북협력기금 직접대출	16	537	집행액:428억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	1	20	
- 민간 금융기관과 남북협력기금의 협조대출	-	-	제도 미흡으로 미시행
-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기은산은)	3	166	
계	20	723	

자료 : 통일부

현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자율적인 판단에 의거 지원한 은행은 일부에 국한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4. 6월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지침」 제정을 통한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시범단지 입주 업체 가운데 (주)로만손 외 8개 협력사에 대해 106.2억 원의 자금 지원 승인을 했다. 기업은행은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부천공업(주)에 30억 원 지원했다. 보증기관도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15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대해 9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개성공단 1차 본 단지 입주예정 24개 기업 중 11개 기업에 대해서도 99억 원의 보증을 지원중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산(주)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원 확대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터 특례보증제도 도입·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표 5>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 보증 운용(안)

구 분	운용방안	비고
보증대상	개성공단 입주 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기업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입주 신청 현황과 업종 상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신축적으로 결정
보증비율	부분보증(시설자금은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으로 운용	
보증한도	기업당 10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70억 원)	기업당 전체 보증한도는 모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포함하며,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 발급
보증료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年 0.5~3% 수준	
보증기간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 이내	

자료 : 통일부

민간 금융 지원 확대의 저해 요인

개성공단이 갖는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진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의 위험이 과중하여 그동안 입주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입주 기업과 금융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위험 및 통행·물류·인력고용 측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순수 신용 대출 취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실제 담보물 처분 및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한 개성 현지자산의 담보 취득도 기피하고 있다.

일반 금융기관은 남북협력기금제도처럼 개성공단 현지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국내 모기업에 대해 대출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개성공단 관련 법규(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규정)상에는 담보취득 및 처분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담보물 처분 및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담보물 처분사례가 없어 회수 예상 가치는 불확실하다. 개성공단 현지자산에 대한 채권회수의 기준과 방식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담보로서의 가치 실현도 곤란한 상태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장기지원에 따른 유동성 위험으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고객예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기간과 운용기간의 Miss-matching 문제가 발생

한다. 대출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로 공단 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기업의 신용·담보능력 확충에 한계에 있다. 남측 본사가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차주 역할을 담당하므로 단기적으로 본사 재무구조의 취약 가능성도 내포한다. 부채비율 증가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고 담보비율이 높아지는 악순환도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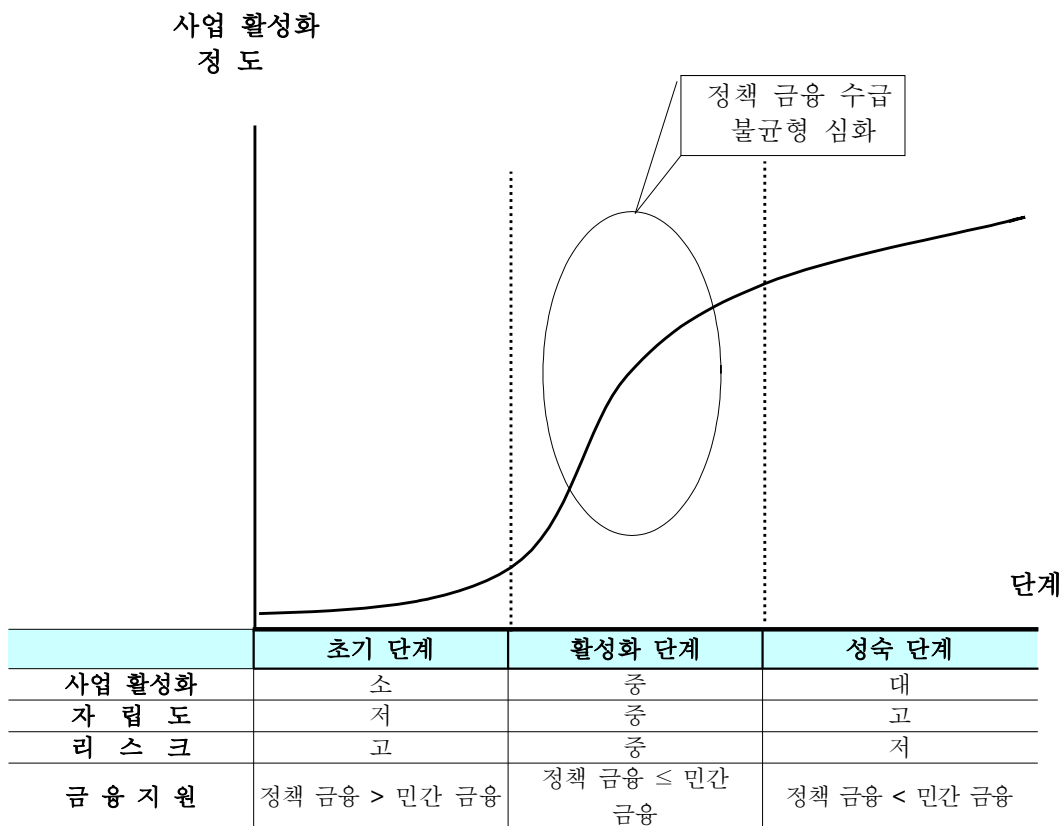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금융 지원 방안

민간 금융 지원방향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도·성공 가능성·리스크 등을 고려한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되,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정책 금융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민간 금융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사업 활성화 단계별 금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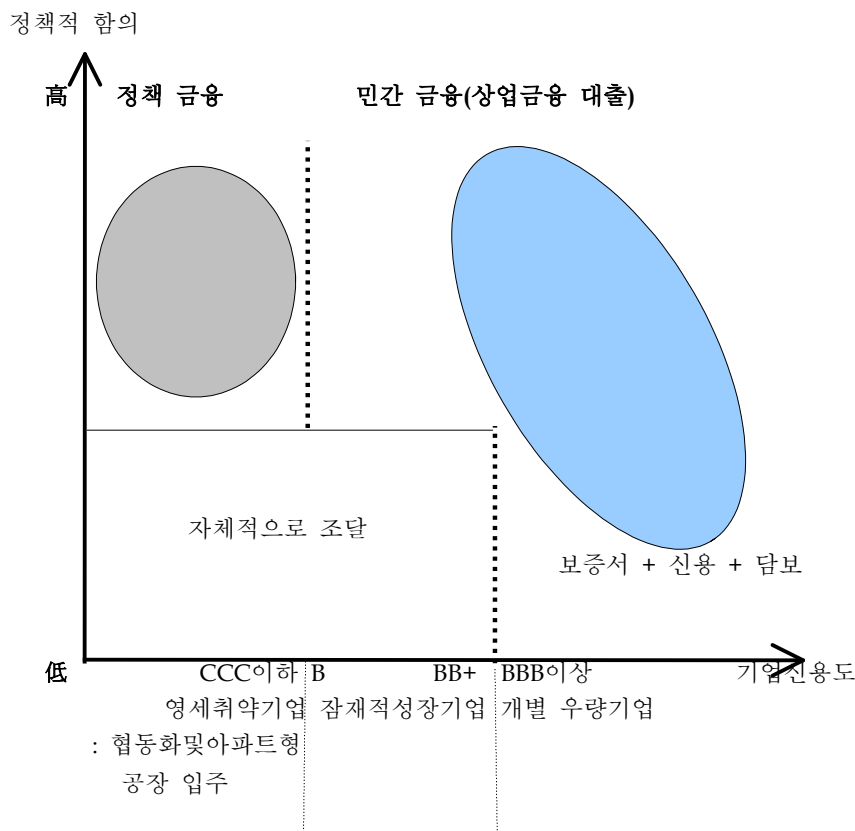
민간 금융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

복합력기금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보조나 이차보전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의 차별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 가운데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 금융은 민간 금융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정책적 목적으로 특화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 대상별로 구분해 보면, 우량기업은 일반 상업금융에서 지원하고, 잠재적 성장 가능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로 지원하며, 정책적 목적으로 진출시키는 영세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정책 금융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2)

<그림 5> 기업대상별 금융 지원 차별화 전략



정책적 진출 필요성은 높으나 신용도(ex; CCC 이하 등급)가 낮은 기업은 정책 금융으로 지원하고 신용도는 높지 않지만(ex; B등급 이상) 정책적으로 진출 필요성이 높은 업체는 물적 담

2) 개별 우량기업은 은행 등 일반 민간지원 기관과의 신용관계를 축적하여 정부의 직접적 지원 없이도 자기 신용으로 상업금융 또는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성공단 진출 필요성이 높고 기업 자체 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 잠재적 성장기업은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기는 하나 아직 신용력이 부족하여 신용보완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다(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개성진출 필요성과 사업성도 있으나 재무능력 및 담보가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 영세 취약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나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정치·사회적 측면의 정책적 필요성 내지는 개성공단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에 진출을 시켜야 하나 사업성을 전망하기 쉽지 않고 재무능력이 거의 없는 영세 취약 중소기업)

보, 신용보완 등을 통한 상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용 등급이 높은(ex; BBB 이상) 우량 기업의 경우는 상업금융으로 지원하고 신용등급이 낮고(ex;BB+ 이하) 정책적으로 진출 필요성이 낮은 업체는 업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편 입주 기업 선정단계부터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은행이 능동적으로 나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입주 기업 선정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분양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여신 결정하게 만들면 된다. 입주 기업 심사위원 구성에 민간 금융기관 전문가를 포함하고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며, 일정 기업을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추천한 입주희망 기업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자금 지원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현행 개성공단 금융 지원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당분간은 일반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성·기술력이 있는 우량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토록 유도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하에 상업적 베이스에서 금융 지원 여부가 결정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량 있는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금융의 참여 확대를 위해 리스크 및 손실발생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 금융기관이 안는 리스크 부문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국내 일반산업단지 투자와는 달리 소요자금 규모가 크고, 건축기간과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어서 투자수익의 예측이 까다로운 편이다. 북한에 소재하고 있어 물적 담보 취득이 어렵고, 관리·운영권의 담보취득이 가능하더라도 역시 일반 물적 담보에 비해 채권회수가 곤란하고 회수기간이 장기이다. 이러한 자금 지원 리스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 사이에 적절히 분담할 것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전하느냐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근거로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리스크 귀책사유나 손실책임 등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금융기관에 이전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상과 대가지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현지 자산의 양도·처분·경매 제도 보장,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대출만기까지 신용보증서 지속운용, 신용대출 손실 부분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부분 보조, 장기저리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공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개성공단에 은행지점 개설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체도의 확대 시행이다. 담보력이 취약하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잠재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을 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등급(B)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보증기관에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지급보증을 하고

개성공단 소재 사업장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양도담보로 취득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기존의 보증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개성공단 전용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관련 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하고, 정부는 평균적인 대위변제율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보전하면 된다.³⁾ 개성공단 보증지원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One-Stop 방식의 신속한 보증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을 보증대상기업에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개성공단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민간 금융의 다양한 지원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경제성 판단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ing) 기법⁴⁾을 적용하여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적합하다. 입주 기업에 대한 출자형태의 투자를 통한 금융 지원도 모색되어야 한다.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통한 금융 지원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와 민간 금융기관 공동으로 1,000억 원 정도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계 은행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반출과 관련한 중장기 신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⁵⁾

넷째,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현지 투자자산의 가치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원활한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투자 자산에 대해서 담보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매제도 보장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환가제도에 의한 정규담보 인정과 관련한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적기관(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개성공단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일괄 취득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개성공단 현지 자산 담보에 대해 사후관리가 필요 없어 대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도 담보 자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은행의 자금 지원 리스크를 줄이고 업체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출금 상환적립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다섯째, 개성공단 지원전용 자금을 신설하여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운전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 개성공단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요자금의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재원을 민간 금융기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출연 및 보조, 금융기관 출자, 개성공단개발채권 발행, 민간펀드 조성, 외자유치 등을 통해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성공단 사업의 보증재원 출연(안): 정부가 보증기관에 추가 출연 :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보증기관(신보·기보)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리스크 감안하여 초기 출연금의 10배 수준으로 유지)을 하면 되는데, 개성공단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증출연 규모: 총 5,418억 원(1단계 549억 원, 2단계 1,035억 원, 3단계 2,448억 원, 확장단계 1,387억 원)이다.

4)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위험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만 국한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수단이라 할 수 있다.

5) 수출신용은 통상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자본재 거래에 적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수출금융으로 중장기 연불수출 금융으로 지칭한다. 통일 이전 동서독간 경제협력 사례에서 서독이 Deutsche Bank를 중심으로 54개 민간은행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GEFI(산업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연불수출금융을 시행한 바 있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개성공단 진출 등 남북금융협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진출업체의 금융 편의 제고와 개성현지 법인의 생산·경영 현황 점검, 담보물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개성공단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금융 지원이 가능토록 개성공단에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를 2~3개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⁶⁾

한편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에 맞추어 금융부문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가 대금결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은행간 환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자체 대응능력 배양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업에 맞는 여신금융 상품과 「개성공단 사업대출」 기법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6) 진출 시점은 개성공단 본 단지 분양업체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는 2007년 상반기가 적당하며, 진출 방식은 1안) 개성지점 추가 설치, 2안) 개성 현지법인 설립, 3) 종합금융 지원센터 형식(은행, 보증기관 등 각 관련 금융기관에서 파견), 4안) 북한은행과의 합작은행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진출 주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개성 현장에서 금융,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이 적합하다.